

auri의 미래는 우리 건축문화의 미래입니다

일시

2017년 6월 14일 11:00

참석자 (가나다순)

김진애 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민현식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고문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온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대 소장

진행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건축과 도시공간> 2017 여름호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개소 당시의 취지와 다짐을 다시 상기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 연구소가 지난 10여 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많은 공헌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질 높은 연구활동과 사업의 추진으로 건축·도시공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상호 | 연구소가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구소의 설립부터 저희 연구소를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개소 당시를 떠올려 볼 때 당시 연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진애 | 연구소 개소 이전에 ‘건축’이라는 명칭이 쓰인 정부부처 위원회나 공공기관이 전무하였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건축’을 다루는, 건축을 명칭으로 사용한 첫 번째 정부위원회였죠. 당시에 건축계로부터 두 가지 염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축’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국가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할 건축기본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지만 여러분들이 열정을 기울여 주셨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덕에 위원회가 발족한 첫 해에 auri가 개소한 데 이어 「건축기본법」도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 첫 발을 뗄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auri에 기대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 국가를 만드는 데 밀거름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국민들도 그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온영태 | 2007년 빈 방에서 시작한 auri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니, auri 초대 소장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당시에 '건축정책'이라고 하면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건축이라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공공 영역의 건축은 '건축을 규제하는 제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건축의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 올리면서 제도의 틀 안에 자리잡도록 하느냐가 당면과제였고, 그것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우리 auri에 기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연구소명에 '공간'과 '도시'를 넣어야 한 것도 '건축'으로 좁혀서는 공공성을 드러내기 어렵고, 통합된 시각으로 발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민간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도시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면, 그래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김상호 | 연구소의 그간 성과나 건축계에 기여한 바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auri에 기대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 국가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현식 | auri가 설립된 후 공공 부문에서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건축기본법」의 제정, 건축 분야 정책연구 등 아직도 유아단계에 있는 건축 분야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건축을 설계하는 현장에 있는 건축가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실제 사용자가 겪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에까지 힘을 쏟는 데 부족하였기 때문에,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auri로 인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애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총평을 하면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auri의 탄생, 「건축기본법」의 제정, 국가건축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인해 건축정책의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데 기여한 바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원래 건축 분야가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자 시장 영역이 크다 보니 통합이나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auri의 탄생으로 건축 분야 정책연구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건축산업의 중심인 건축 실무진과의 네트워크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영태 | 건축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처음이다 보니, auri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였지요. 당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벌였고, 이 또한 건축문화의 발전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auri에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량이 건축물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사례로부터 보여주는 생각에서 영주와 제천의 도시재생사업에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건축계로부터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 일은 건축사들의 역할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개념을 단지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공간으로, 도시로 확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했고, 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auri로 하여금 많은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김진애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
건축 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보고하였고,
이후 auri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다.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2012)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진애의 도시이야기' 코너에 참여하고 있다.

박인석 | aur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건축을 둘러싼 문제 상황은 10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auri가 설립되었고, 염원으로 만들어진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특히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탄생하게 되

는 벌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건축정책 방향에 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부분적이나마 의미있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와 일련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auri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 덕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이를 인식하는 우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진전이라는 것이지요.

김상호 | 우리 건축문화의 경쟁력, 선진국들과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온영태 | 핀란드의 경우 의료서비스나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반드시 공간정책 측면을 고려해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정책이 이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제일 마지막에 단계에 건축 행위가 일어납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조성 단계에서부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산 등 모든 것이 정해진 이후에 설계가 의뢰되는 단계에서 건축가들의 역할이 발휘됩니다. 건축물 조성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 등 합리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할 듯 합니다.

박인석 |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 행위와 관련된 제도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된 많은 법에 흘어져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건축법」이 196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뒤늦게 생긴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축 행위는 토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련된 각종 기술업무 중 설계만 건축관련법에 따르고 있을 뿐, 기획부터 감리까지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로 취급되면서 진행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축공사 관련 행위 일체를 분리하고 기획단계부터 시공단계 사후설계관리에 이르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건축에 맞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민현식 | auri가 그간 해 온 많은 연구와 실현된 프로젝트 가운데, 취지와 결과는 좋더라도 시민들 또는 건축가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실제 실적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법규나 제도와의 관계설정에 미흡

“건축의 개념을 단지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공간으로, 도시로 확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했고, 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auri로
하여금 많은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습니다.”



온영태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지냈다.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 주택공사·토지공사
기술심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박인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축이 바꾼다>(2017), <아파트 한국사회>(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러한 체계와 일련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auri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 덕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협정제도’의 경우, 지극히 소규모의 건물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건축법’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건축 설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 아주 어려운 사항이 심의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심의제도와 건축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진애 | 우리의 도시환경은 상당 수준 나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농촌 환경 등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auri 위상을 독립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auri의 역할이나 건축정책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지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수록 우리 건축의 사회적 역할, 공공적 기여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 auri가 앞으로 뭐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와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온영태 | 공간을 다루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 시작 단계에서부터 건축 전문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가나 심의 등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 세 가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건축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현식 | 민간 건축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꾀부에 와 닿는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꾀부에 와 닿는 제도라 함은 건축 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첨예한 문제들입니다. 현대사회는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의 여전 변화는 더 복잡다각해지고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분야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있는 분야인 만큼 민감하게 사회의 변화 속도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건축 유형들도 많아졌지만, 건축제도나 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옛(준)공업지구에 봄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지식산업센터’, 역세권에 집중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투숙객을 위한 ‘아파트형식의 호텔’, 이미 오래전에 정착했지만, 또 다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커피숍’,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집중하여 연구해야 할 다양한 거주형식과 이미 주택이 아닌 거주형 건물들 등 해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건축법’에 규정한 마땅한 ‘유형’이 없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라

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 유형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현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사후 평가와 모니터링도 면밀히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한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질되었거나 버려졌는가?’ 등 평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이나 도시설계에 구체적으로 쓰일 ‘계량적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설계현장에 자료와 데이터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설계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별씨 폐기되어야 마땅한 일본판 ‘건축설계 자료집성’을 뒤적거리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들이 민간 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석 | 건축 분야의 인식 제고와 법·제도적 기반을 닦아 가는 데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토목과 건축의 산업규모 비중은 몇 대 몇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7대 3 정도로 토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건축산업 규모가 토목 산업 규모의 3배입니다. 그만큼 민간의 건축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 만 현실은 토목직 공무원 수가 건축직 공무원 수의 세 배이고, 법과 제도도 건축이 토목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SOC 분야인 토목이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건축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중요한 산업입니다. 건축문화는 물론 산업 측면에서도 건축이 제자리를 찾아 진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auri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진애 |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지요. auri도 마찬가지죠. 좋은 정책 수요처를 만난다면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데 더욱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려면 정책 수요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려면 정책에서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건축 분야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건축을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가 여러 분야, 여러 부처에 얹히고 설켜 있는 현실이 그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기도 하지요. 국토교통부는 물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에 다가서는 건축 풍토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을 지냈다.
원도시건축 등을 거쳐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대표로 일했으며,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Hon. FAIA)으로 활동하였다.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2006),
<민현식 architecture 1992-2012>(2012) 등의 저서가 있다.

“**민간 건축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제도의 마련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들이
민간 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